

KBA Korea Business Association Europe WEEKLY BRIEFING

2023.01.09 - 01.13

VOL.343

CONTENTS

I EU TRADE POLICY

- ▶12.09 EU 집행위, '의료장비규정(MDR)'에 따른 의료장비 재인증 기간 유예 법안 채택
- ▶12.09 유럽의회 및 산업계, 'EU 데이터법'의 민간기업 산업정보 공유 의무화에 우려
- ▶12.10 유럽특허청(EPO), 유럽과 일본이 수소 관련 국제특허 주도...한국은 초기 단계
- ▶12.10 EU-영국, EU의 북아일랜드 통관정보 접근권 합의...통관 갈등 해결 가능성 고조
- ▶12.11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IRA법 대응한 EU '청정기술법' 도입 추진
- ▶12.11 EU,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 포함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부담 추진
- ▶12.12 EU 역외보조금 규정 금일 발효
- ▶12.12 유럽의회 경제통화총, 공급망실사 대상에 금융서비스 기관 포함 요구
- ▶12.13 말레이시아, '삼림 공급망실사법'에 대응 EU로의 팜오일 수출 중단 시사
- ▶12.13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II EU 환경규제 뉴스 - KIST EUROPE 제공

- ▶12.13 ECHA, 코발트 화합물 작업노출기준(OEL) 제안
- ▶12.13 P&G, '벤젠' 관련 집단 소송에서 800만 달러 합의금 지불 합의
- ▶12.13 EUON, '나노물질의 분해성, 잔류성 및 안전 설계'에 관한 보고서 발표

① EU 집행위, '의료장비규정(MDR)'에 따른 의료장비 재인증 기간 유예 법안 채택

- EU 집행위는 6일(금) 2017년 '의료장비규정(MDR)'에 따른 의료장비 재인증 기간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
 - 2017년 발효한 MDR 규정은 20년간 적용된 의료장비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1년 5월 적용되기 시작, 약 50만 종의 의료장비에 대해 MDR 규정에 따른 재인증 의무를 부여
 - 2021년 5월 MDR 규정 적용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 업무처리 역량 한계와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른 기업의 준비 부족으로 재인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이미 작년 MDR 규정에 따른 재인증 지연 사태가 예견된 바 있으며, 지난 4월 유럽의회도 약 2만 종에 달하는 의료장비 기술인증이 MDR 규정에 따른 단기간에 완료되기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에 공감을 표명,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
 - 이에 집행위는 재인증 지연에 따른 역내 의료장비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인증 유예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장비 종류에 따라 재인증 기간을 연장기로 결정
- 유예 기간은 장비의 종류에 따라 △페이스메이커, 힙 임플란트 등 고위험 장비는 2027년 12월, △실린지, 재사용 외과 수술장비 등 중저 위험 장비는 2028년 12월, △제3형(Class 3) 주문제작 임플란트 장비 등은 2026년 5월까지 재인증 완료기간이 연장됨
 - 기존 지침에 근거해 획득한 인증으로 역내 시장에 시판매되는 의료장비의 판매 종료 시기도 연장되며, 2021년 5월 26일 이전 부여된 지침에 근거 획득한 인증의 유효기간도 연장
- 한편, 이번 집행위의 MDR 규정에 따른 의료장비 재인증 기간 연장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

② 유럽의회 및 산업계, 'EU 데이터법'의 민간기업 산업정보 공유 의무화에 우려

- 유럽의회와 산업계는 정부 등 공적 기관의 요구 시 기업의 산업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이른바 '유럽 데이터법(EU Data Act)'의 관련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
 -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 통화기록 정보를 방역활동에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2월 'EU 데이터법'에 위기 대응 등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산업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데이터법의 관련 규정은 '공공위기 대응, 위기 방지 및 재난 극복' 등의 목적과 함께 '공공의 이해와 관련한 정책 수행의 필요성이 법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민간기업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난 EU 이사회 의장국 체크는 해당 규정에 '정보제공 요구는 시간 및 공간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 **이에 대해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 등은 작년 5월 관련 규정의 적법성, 필요성 및 비례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 또한, 유럽의회 의원 및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도 데이터법 관련 규정이 위기대응 목적에서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 수행 목적의 정보 공유 요구로 발전할 가능성에 우려

- 특히, 유럽의회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법원 영장에 의한 법집행보다 광범위한 정보 접근을 정부에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

- 비즈니스유럽은 데이터법 규정상 정보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지방 및 지역 정부와 기관 및 EU 기관' 등으로 정의된 점도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며 정보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의 리스트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

- 법안이 정보 공유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유된 정보의 처리, 삭제 및 필요 시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한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

- 디지털유럽(DigitalEurope)은 EU 회원국별로 법치주의 해석에 여전히 간극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른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정의의 오남용 소지를 지적

-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바르셀로나의 실시간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전염병 전파 상황을 파악한 경험에 근거, 광범위한 정보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강조**

- 특히 통신사 등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거주자, 통근자 및 관광객 이동 등의 현황을 파악,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 도입에 긍정적 의견도 제시

- **한편, 유럽의회는 3월경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며, 작년 회원국 간 이견으로 3차례에 걸친 데이터법 문안을 변경한 바 있는 EU 이사회는 금기 스웨덴 의장국 중재하에 조만간 데이터법과 관련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

③ **유럽특허청(EPO), 유럽과 일본이 수소 관련 국제특허 주도...한국은 초기 단계**

- **유럽과 일본이 지난 10년간 수소 관련 국제특허를 주도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수소 관련 국제특허 출원에서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남**

* 수소는 연소 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요소 평가. EU는 2020년 'EU 수소전략'에서 2050년까지 EU 에너지 믹스 약 13~14% 충당을 목표. 친환경 수소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수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분야로 평가됨

- 유럽특허청(EPO)은 10일(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1~2020년 10년간 복수국가에 출원된 국제특허의 28%가 유럽에 출원되어 유럽이 가장 많은 수의 수소 관련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독일은 11%, 프랑스는 6%를 차지)
- 유럽에 이은 다수 국제특허 보유국은 일본으로 전체 수소 관련 국제특허의 약 24%가 일본에 등록되었으며, 해당 기간 중 관련 특허 증가속도는 유럽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남
- 수소 분야 국제특허를 주도하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급격하게 감소, 해당 기간 중 20%의 국제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수소 생산 보조금 등의 영향으로 향후 국제특허 출원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중국과 한국은 수소 분야 국제특허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많은 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10년간 특허출원이 각각 15.2%, 12.2% 증가한 점이 주목

● 유럽의 경우 글로벌 수소 시장 개발 및 주도권 획득의 의지가 매우 높은 반면, EU와 각 회원국의 규제가 수소 산업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

- EPO 관계자는 일본이 가정용 수소 사용을 적극 지원한 시기에 수소 관련 국제특허가 급증한 반면 해당 지원이 중단된 후 특허도 감소한 사례를 지적, 수소 분야 연구개발 및 수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친환경 투자금 지원이 가능한 이른바 '친환경 수소'의 정의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채 마감시한으로 설정한 2022년을 도과한 상태이며,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021년 EU 집행위가 제안한 'EU 수소 및 친환경 가스 시장 패키지 (Hydrogen and Decarbonised Gas Markets Package)'를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

● 한편, 유럽은 화학적 전기분해 및 수소 생산과 관련, 국제 수소 연구개발을 주도

- 유럽은 3가지 수소 생산 방식* 가운데 최신 기술인 SOEC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위원회(CEA)'가 SOEC 기술 관련 국제특허 60개를 보유, 전세계 SOEC 기술을 주도. CEA는 PEM 기술 관련 국제특허도 18개를 보유

* 알칼라인 수전해,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PEM),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등

- 다만, 유럽이 국제 수소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상용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지적되며, 이에 첨단 수소 생산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

④ EU-영국, EU의 북아일랜드 통관정보 접근권 합의...통관 갈등 해결 가능성 고조

- EU와 영국은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하는데 합의, 북아일랜드 통관문제를 둘러싼 양자 간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
 - EU 마로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영국 제임스 클레버리 외무장관은 9일(월) 양자 간 협상 후 공동선언문에서,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통관 관련 IT 시스템에 대한 EU의 접근권 부여에 합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 EU는 2021년 초부터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을 위해 북아일랜드 세관의 IT 시스템 접근권과 EU 유입 상품과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의 특징이 용이하도록 관련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
 - 이번 양자 간 합의 및 후속조치를 통해 EU측의 북아일랜드 통관 데이터 등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지면, 세관에서의 실물 검사 없이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최종 목적지 등 체크가 용이해짐에 따라 통관을 둘러싼 양자 간 갈등 해결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
- 브렉시트 협정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위생검역 및 상품 표준 등 규제와 관련 EU 단일시장 규제에 복속하며, EU 유입 상품과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 구분을 위해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시행키로 규정
 -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섬을 분리하는 것으로 헌법적 완결성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반발, 이에 대한 저항으로 북아일랜드 연합정부 구성을 거부
 - 이번 합의에 대해 민주연합당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자당의 핵심 요구가 반영된 광범위한 통관문제가 해결될 경우 정부 구성에 대한 반대도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

⑤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IRA법 대응한 EU '청정기술법' 도입 추진

- EU 집행위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유럽의 이른바 '청정기술법(Clean Tech Act)' 도입을 추진
 - 브르통 집행위원은 프랑스, 폴란드, 벨기에 및 스페인 등 IRA법에 따른 자국 기업 유출을 우려하는 회원국 정상들과 관련 법 도입을 협의, EU 회원국의 조율된 입법적 대응과 27개 회원국 모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 보조금 도입 등을 강조
 - * 보조금 제도 개편이 독일과 프랑스 등 부유한 회원국과 포르투갈과 그리스 등 보조금 지원 여력이 부족한 회원국 간 불평등 및 단일시장의 균열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
 - 특히, 보조금 지급이 용이한 'EU 중요 공통 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 승인이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문제점 등 관련 절차와 허가의 신속한 발급의 중요성을 지적

- 브르통 집행위원은 관련 문제를 협의한 모든 정상들이 IRA법에 대한 EU의 느린 대응을 비판하며 청정기술법 도입 등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에 공감했다고 설명
- 이에 브르통 집행위원은 11일(수) EU 집행위원단회의에서 청정기술법과 관련한 구체적 구상을 설명, 법안 도입에 부정적인 일부 집행위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
 - * 작년 12월 베스타거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보조금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며 보조금 제도 개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 다만, IRA법 대응과 관련한 맥락의 보조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기존 강경한 입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
-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다음 주 다보스 포럼에서 EU의 IRA법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으로, 이번 집행위원단회의에서는 브르통 집행위원의 청정기술법을 포함한 관련 논의에 집중될 전망
- 이미 EU는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상황 하의 보조금 규제 완화 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집행위도 현재 IRA법에 대응한 보조금 지급 유연화를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1월 말 보조금 제도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
- 한편, 금기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의 라르스 다니엘손 주EU 대사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조금 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IRA법에 대한 적절한 영향평가 수행 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⑥ EU,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 포함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부담 추진

- EU가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 부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서비스 사업자도 네트워크 비용 부담 범위에 포함될 전망
 -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2월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공정분담* 이니셔티브를 촉구하는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 * 공정분담의 개념은 '서비스공급자 비용부담원칙(sender-pays principle)'에 근거, 넷플릭스와 구글 등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경제 수혜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 메타버스, 가상현실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 온라인 혁신기술에 따른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교환이 예상된다고 지적, 2023년 초 공개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유럽 네트워크 인프라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
 - 메타버스 서비스 등에 따른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고, 인프라 확대는 투자의 적절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
- 앞서 작년 5월 EU 집행위는 통신망 사업자의 고성능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수익의 적정성을 검토, 2022년 말 이와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발표

- 이에 대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이니셔티브 제안에 앞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니셔티브 제안도 연기된 상태
- 수차례의 연기 후 집행위는 금주 후반 이니셔티브 관련 공개 의견청취를 개시, '서비스공급자 비용부담원칙을 포함, 통신산업의 미래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
- 또한, 집행위는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초래할 잠재적 영향을 검토, 오는 5월 3일 관련한 (비입법적) 이니셔티브 초안을 발표할 예정
- 한편, 콘텐츠 사업자 등은 통신망 사업자의 이중 수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시민사회단체도 콘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분담에 따른 '망 중립성' 훼손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 이와 관련, 작년 10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도 망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니셔티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

⑦ EU 역외보조금 규정 금일 발효

- EU가 제3국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단일시장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역외보조금 규정'이 12일(목) 발효, 오는 7월부터 규정이 실제 적용될 예정
- 역외보조금 규정은 제3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별 기업 등에 법적 또는 사실상 제공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보조금으로 간주하며, 규정 적용 대상 기업은 EU 기업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 입찰 시 보조금과 관련한 신고의무를 부담
- 규정에 따르면, 허위내용을 신고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 미신고 기업에 대해 10%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인수합병 계약 체결 금지,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
- EU 집행위는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관련 신고 방법, 기한, 비밀정보 접근 등 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행입법을 통해 수주 내 발표할 예정이며, 이행입법은 4주간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올해 중순경 확정될 예정
- 규정에 따라 집행위는 7월 12일부터 시장 왜곡 초래 우려가 있는 보조금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10월 12일부터 각 기업에 대해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부과됨

⑧ 유럽의회 경제통화총, 공급망실사 대상에 금융서비스 기관 포함 요구

-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M)*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과 관련한 위원회 의견 초안에서 금융서비스 기관도 실사사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가 주관 위원회이며, 경제통화위원회(ECON), 외교위원회(AFET), 국제통상위원회(INTA),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ENVI), 고용사회위원회(EMPL)가 법안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EU의 이른바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의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으로 EU 이사회는 작년 11월 법안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
- 금기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 중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가 5월 이전 의회 입장을 확정,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의(trilogue)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
- 언론에 공개된 경제통화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 초안에 따르면, 지침 적용 대상을 집행위 원안과 같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및 글로벌 순 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적시
 - 이는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및 글로벌 순 매출 3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EU 이사회 입장보다는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인 반면,
 - '종업원 수 500명 이상 또는 글로벌 순 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주장하는 의회 일부 정파 주장보다는 적용 대상을 제한한 것
 - 특히, 초안은 실사 대상에 금융서비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강조, 금융서비스의 포함 여부를 각 회원국 선택에 맡긴 EU 이사회 입장과는 다른 의견의 제시
- 유럽의회 정파 간 공급망실사 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로 확대하는 주장과 '공급망(supply chain)'으로 한정하는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초안은 '가치사슬' 용어를 사용하며 최종적으로 의회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적시
- 인권침해 피해 보상과 관련, 초안은 기업이 피해 보상을 통해 공급망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적시. 다만, '합리적이고 적용 가능한 경우'라는 조건을 추가
- 이번 초안은 경제통화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표결에 앞서 금융기관의 정의, 중소기업의 의무,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등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⑨ 말레이시아, '삼림 공급망실사법'에 대응 EU로의 팜오일 수출 중단 시사

- 말레이시아는 EU의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이하 '삼림 공급망실사법')을 차별적인 무역장벽이라며 EU로의 팜오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
 - EU는 지난 12월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오일, 대두, 목재, 고무, 목탄 및 이의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도입하는 이른바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을 확정
 - 동 법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상품인 팜오일 및 팜오일 파생상품 (바이오 디젤은 제외)을 EU로 수입할 경우 해당 수입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벌채 등으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파딜라 유소프 부총리 겸 플랜테이션산업부 장관은 12일(목)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이 팜오일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에 해당하며 필요할 경우 EU로의 팜오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
- 또한, 팜오일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EU와 미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 '팜오일 생산국 위원회(CPOPC)'와 공동으로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총리는 팜오일 관련한 EU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팜오일 생산국위원회와의 협력 강화에 합의
- 이에 대해 주말레이시아 EU 대사는 삼림 공급망실사법이 추가적인 삼림 벌채 및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EU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강조, 파딜라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말레이시아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
- 말레이시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작년 전체 팜오일 수출의 9.4%인 147만톤을 EU에 수출. 이는 전년 대비 10.5% 감소한 것
- 전세계 3번째 팜오일 소비국인 EU는 삼림 황폐화를 이유로 2018년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에서 팜오일 바이오디젤 수입을 점차 축소, 2030년에 금지하기로 결정, 삼림 공급망실사법 도입 이전에도 이미 EU의 팜오일 수입은 감소가 예상된 바 있음

⑩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 대만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12일(목)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관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
- TSMC는 지난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용 22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반도체에 중점을 둔 반도체 생산공장을 드레스덴에 신설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
- 이번 발표는 작년 보고서를 재확인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의 조건으로 반도체 수요 및 정부의 지원 수준을 언급한 점이 주목
- TSMC는 작년 일본과 미국(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일본에 두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EU는 2030년까지 역내 글로벌 반도체 생산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른바 '반도체 빅쓰리(인텔, 삼성 및 TSMC)'의 역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

- 지금까지 인텔이 17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마그데부르크 생산공장 건설을 약속한 상태이나, 인텔은 지난 12월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설 약속 이후 다양한 상황 변화를 이유로 건설 일자를 연기. 이는 글로벌 경기후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위축이 원인으로 지목
- 한편, TSMC가 유럽 생산공장 신설에 '정부의 지원 수준'을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시설이 EU의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 기준인 이른바 '독창성 기준(first of a kind facility)'을 충족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

II

EU 환경규제 뉴스 - KIST EUROPE 제공

① ECHA, 코발트 화합물 작업노출기준(OEL) 제안

- ECHA 위해성평가위원회(Committees for Risk Assessment, RAC), 코발트(cobalt) 및 무기 코발트(inorganic cobalt)에 대한 작업노출기준값(Occupational limit values, OELs)을 제안함.
- RAC 는 흡입성(inhalable fraction) 코발트 입자의 OEL은 8 시간 평균 $1 \mu\text{g}/\text{m}^3$, 그리고 호흡성(respirable fraction) 코발트 화합물은 $0.5 \mu\text{g co}/\text{m}^3$ 의 OEL 을 제안함. RAC 는 생물학적 지침값(biological guidance value, BGV)으로 성별 소변 중 농도 값을 활용하여, 여성은 $2 \mu\text{g Co}/\text{L}$, 남성은 $0.7\mu\text{g Co}/\text{L}$ 의 농도값을 권고하였으며, 피부 및 호흡기 감작성 분류표시도 제안함.

[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 \(클릭\)](#)

② P&G, ‘벤젠’ 관련 집단 소송에서 800만 달러 합의금 지불 합의

- P&G(Procter & Gamble)는 에어로졸 제품 내 발암물질 벤젠(Benzene)이 포함되어 제기된 소송에서 800 만 달러 합의금 지급에 합의함.
- 이번 소송은 유사한 24건의 개별 사건이 통합되어 진행되었으며, 도출된 합의를 통하여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기업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이 확인됨.
- P&G 제품들 중 2015년 11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판매된Secret, Old Spice, Pantene 등 브랜드의 에어로졸 탈취제, 드라이샴푸 등의 제품에 상기 소송결과(합의금 지급)가 적용됨.

[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 \(클릭\)](#)

③ EUON, ‘나노물질의 분해성, 잔류성 및 안전 설계’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UON(유럽나노물질관측소), ‘나노물질의 (생)분해성, 잔류성, 안전 설계에 관한 보고서 (Study on (bio)degradation, persistence and safe by design of nanomaterials)*’를 2022년 12월 발간하였음.

- 상기 보고서의 목표는 나노물질 및 관련 유기 코팅제의 (생)분해성, 잔류성에 대한 최신 기술, 현재 기술과의 격차 및 연구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나노물질 안전 설계(safe by design, SbD)에 관한 현 상황 분석 등임.

[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 \(클릭\)](#)